

충남리포트 제113호

ChungNam Report

2014. 07. 14.



CONTENTS

< 요약 >

1. 사회문제로서 자살의 의미
2. 충남 자살양상의 특징
3. 지역 자살률 차이의 영향 요인
4. 자살예방정책 분석
5. 결론 및 정책제언

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

이수철

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, sclee@cdi.re.kr

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의 자살양상의 특징을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복합적 차원으로 탐색하여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

요 약

- 충남지역의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, 지역별로는 농산어촌지역의 자살률이 도시지역보다 상당히 높으며,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음
-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- 지역별로 자살률은 인구밀도가 낮을수록,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, 이혼율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남.
- 국내외 자살예방 정책을 분석해보면, 국내의 자살예방정책은 우울증 관리라는 개인의 병리적 측면만 강조하고,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
- ‘생명사랑 행복마을’로 대표되는 충남의 자살예방정책은 이러한 두 측면의 균형이 잡혀 있는 모범적 정책이지만,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
- 충남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.
 - 첫째, 효율적인 자살예방정책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정책 수행에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 증액이 필요함
 - 둘째,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정책인 ‘생명사랑 행복마을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효과를 견인하는 프로그램과 운영방안 마련 필요
 - 셋째, 자살예방을 위한 중앙정부-충남-시군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함

사회문제로서 자살의 의미 ◀

01

- 한국사회의 자살률(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, 2012년 기준 28.1)은 급격히 상승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 - 자살의 증가는 사회의 정상성(normality)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.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, 그 내면을 들춰보면 지극히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음
 -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은 그 사회가 앓고 있는 병리적 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, 한국 사회의 자살급증의 기저에는 자살행위를 추동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자리 잡고 있음.

- 충남의 문제는 심각한데, 최근 광역자치단체로는 최고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음,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자살률은 30.3명인데 반해 충남은 42.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.
 - 충남은 전국에서도 GRDP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자살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, 지역적 편차가 첨예하게 드러남. 청양, 태안, 예산, 홍성 등 농어촌 지역이 계룡, 천안, 당진 등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음.
 - 충남지역 자살 양상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노인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다. 전체 자살자 중 60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이 47.3% 차지하여 전체 자살자의 절반에 육박함
 - 이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충남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이 가장 자살에 취약한 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음.

-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 차원에서의 자살률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밝히고,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자살예방정책을 탐색하는 것임.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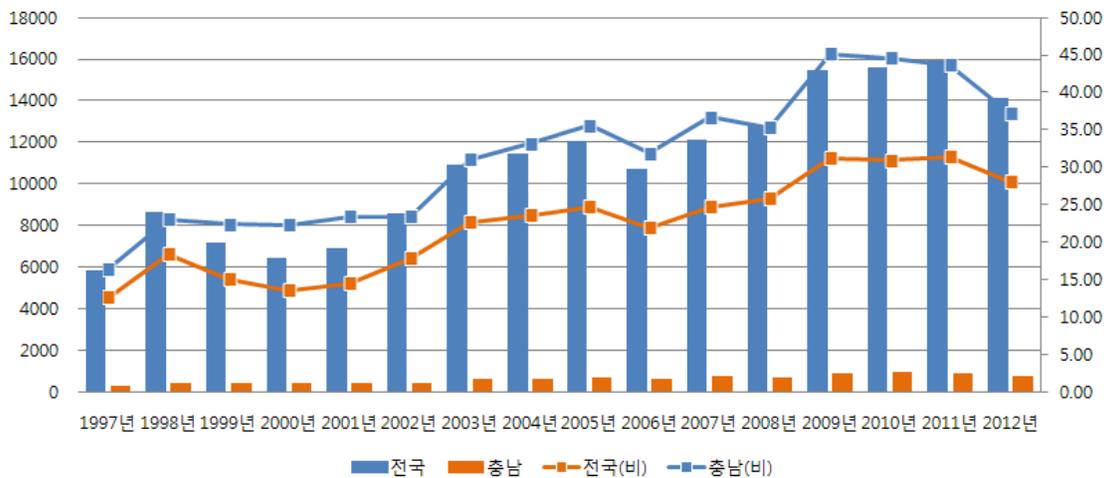
- 한국 사회와 비교하여 충남의 자살 양상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?
 - 우리사회의 자살 양상의 지역별 차이, 특히 충남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?
 - 충남의 높은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?
-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(1997~2012) 중 자살로 인한 사망 기초자료 분석하였음
 -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과 광역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비교 분석을 충남의 자살 양상의 특징을 추론하였음.
 - 특히 지역별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살률의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0여개의 통계지표를 찾고, 이를 정렬하여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함
 - 지역별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은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23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음.
 - 종속변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자살률과 노인자살률로 선정하였고, 독립변수로는 인구, 경제, 환경, 사회,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영역을 선정하였고, 이 영역 내에 국가통계포털, 지방재정고,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각 년도별로 데이터 셋을 구성하고, 이를 패널 데이터 형식으로 간주하여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
 - 전체/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학적 요인, 재정경제적 요인, 지역환경적 요인, 사회문화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적 요인을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
 - 마지막으로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모델이 되는 핀란드의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와 노원구를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을 충남의 자살예방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

충남 자살양상의 특징 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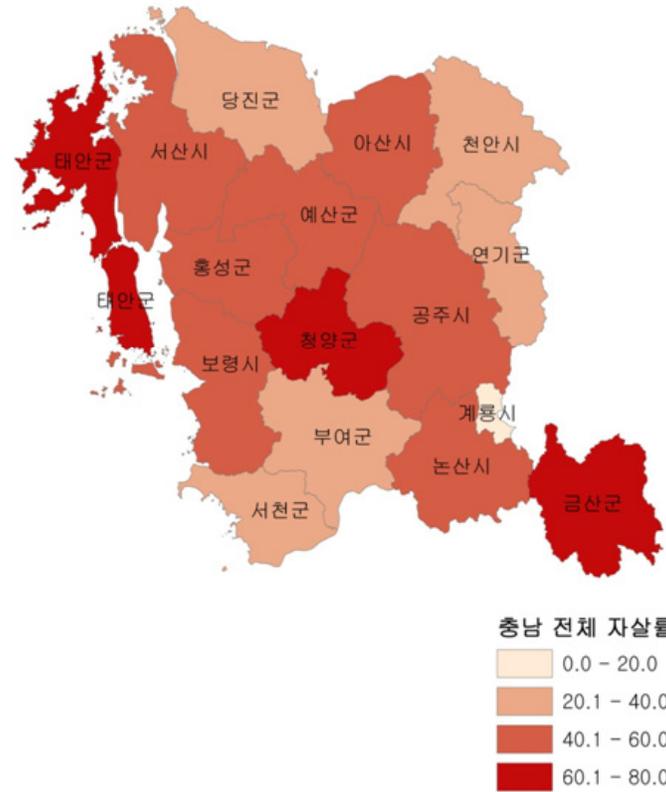
02

- 충남은 전국평균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임.

연도별 자살인구 및 자살비(단위:10만명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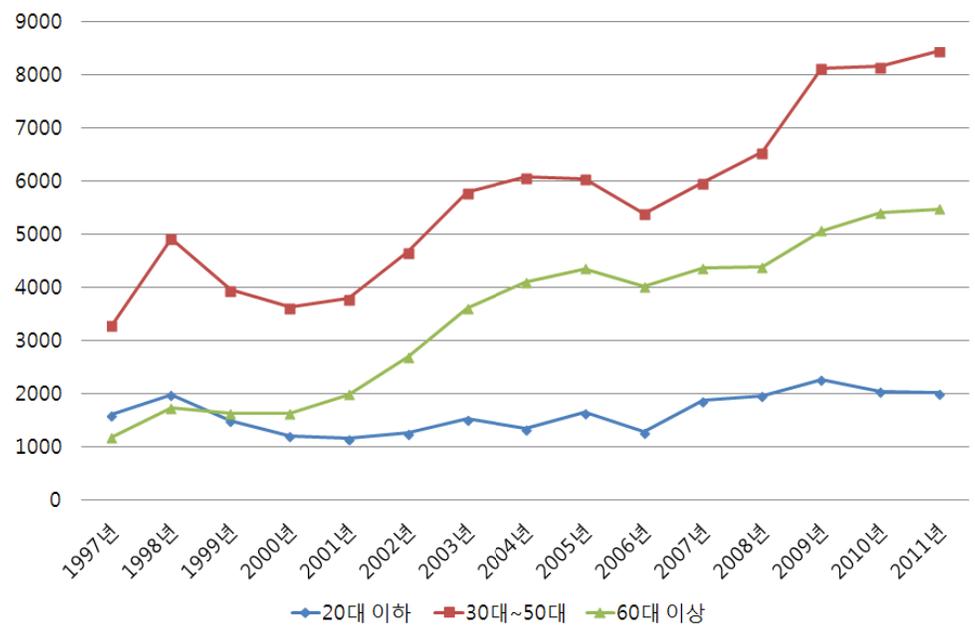


- 충남의 자살률은 2002년 이후 전국 평균 이상의 자살률을 보임
 - 2012년 자살률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, 이는 사회적 안정과 자살예방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임
- 충남지역의 전체 자살률 분포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과의 상당한 격차를 보임(2011년 기준)
 - 충남의 자살률은 태안, 청양, 금산 등 농산어촌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.
 - 천안, 아산, 당진, 부여, 서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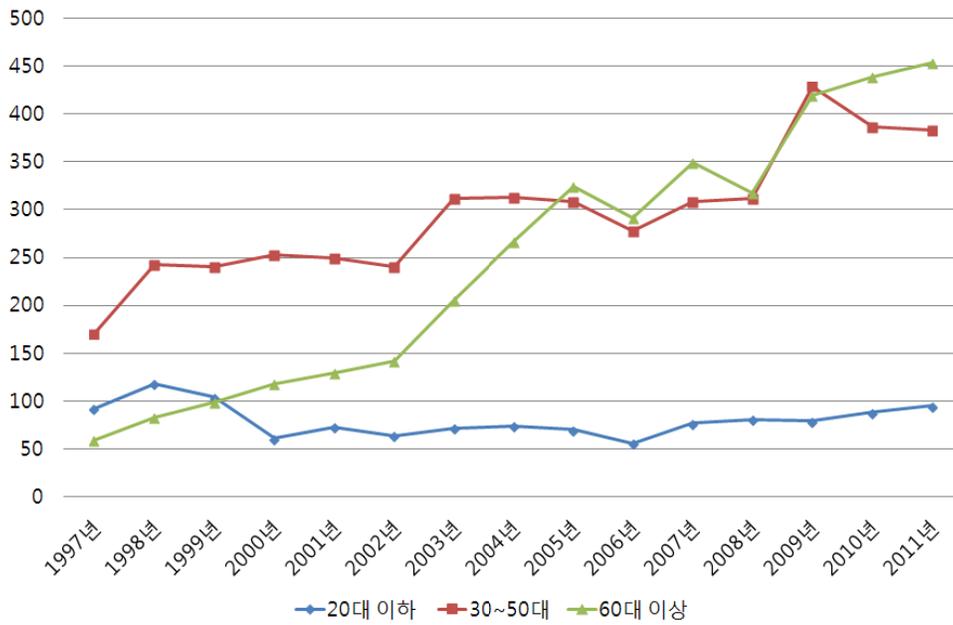


● 충남지역은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전국평균과 비교해 높다.

전국 세대 구간별 자살인구



충청남도 세대 구간별 자살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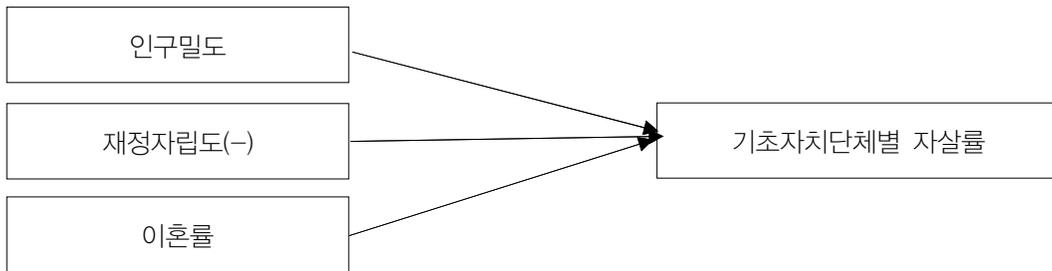


- 전국 세대 구간별 자살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30-50대의 청장년층의 자살 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.
- 그러나 충남은 2004년까지는 전국 추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상대적으로 노인 자살인구가 증가하여 2011년 현재 가장 자살에 취약한 연령집단이 되었음.

03

▶ 지역 자살률 차이의 영향 요인

● 지역별 전체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



● 지역별로 인구밀도가 낮으면 자살률은 높음

- ‘인구밀도’는 노인인구비율, 인구감소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, 확대해석하면 노인인구비율, 인구증가율은 자살률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론 가능
- 결국 인구가 공동화되고 노령화 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을 것으로 추론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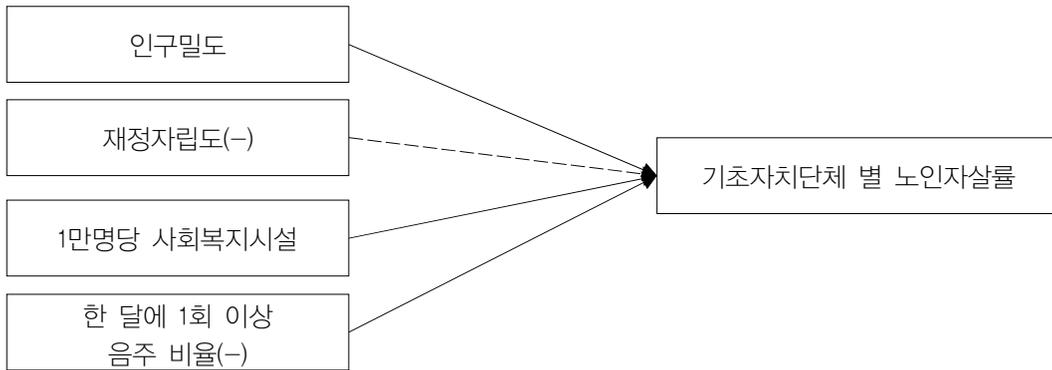
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음

- 재정자립도는 빈곤율(-), 소득세(-)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. 결국 지역별로 빈곤율이 높고 소득세가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.

● 이혼율이 높으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 가능

-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면 자살률이 높다는 기존의 사회적 이론과 일치하는 현상

● 지역별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



● 인구밀도가 낮으면 노인자살률은 높음

- ‘인구밀도’는 노인인구비율, 인구감소율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, 확대해석하면 노인인구비율, 인구증가율은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 가능.
- 결국 공동화되고 노령화 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노인자살률의 높을 것을 추론할 수 있음

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노인자살률이 높음.

- 재정자립도는 빈곤율과 소득세의 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
- 결국 지역별로 빈곤율이 높고 소득세가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노년층에 대한 정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 가능

● 1만명당 사회복지시설(복지비용)이 많으면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 가능.

-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, 복지비용 지출이 높은 지역이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고 현재 복지비용 지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함

●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비율이 높은 곳이 자살률이 낮음.

- 이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가 필요한 것이 아님. 지나친 음주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
- 음주율 조사가 성인이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이기 때문에 음주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추론 가능.

04

▶ 자살예방정책 분석

-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전범이 되는 핀란드의 자살예방정책은 전국적인 자살률 상승에 국가적인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정책임
 - 전문가 집단 5만명을 동원하여 전국 인구를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 결과, 우울증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혀짐
 - 우울증에 대한 단기적 대처뿐만 아니라, 사회적 지지대의 확보라는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야 함

- 한국의 경우 핀란드 모델을 일부만 받아들여 제한된 자원(극소수의 전문가, 작은 예산)으로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요인에만 집중하는 정책을 펼침
 - 소수의 우울증 선별 검사로 사례관리에 집중
 -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라는 사회적 요인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

-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사업
 - 자살예방정책의 구체적 시행이 아니라, 선언적이고 캠페인 성격이 강함
 - 실제 현실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은 부재

- 광역과 기초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- 서울시와 노원구
 - 서울시는 상담전화 등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을 개별 구에 이관하는 것과 같이 광역은 기초단체를 지원하고 기초는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 구분
 - 상담, 사례조사, 사례 관리 등 개인적 병리현상에만 집중하는 정책
 - 중앙정부-광역-기초 간의 공조 부족하고, 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외면하여 장기적 예방정책의 부족

- 충남의 자살예방정책
 - 중단기적인 사례관리와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이라는 정책 조화

- 서울과 비교하면 기초와 광역의 역할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, 고위험군 사례조사, 심리적 부검, 상담, '생명사랑 행복마을' 사업 등 가장 앞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,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 있음

● 충남의 '생명사랑 행복마을' 정책

- 충남 농촌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마을 단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3백만원 (도비 30%, 시군비 70%)으로 운영되는 사업
- 2011년 충남 자살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자살자발생마을과 우울 정도가 높은 마을을 지정
- 정신 및 신체건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민 간의 결속을 다지는 등 마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1년 단위의 장기 프로그램 운영

● '생명사랑 행복마을'의 운영 현황과 성과

- 2011년 3개 마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, 2012년 13개 마을로 확대 실시하였으며, 2013년부터는 보건진료소별 1개 마을 등 총 282개 마을로 확대하여 사업 진행 중
- 2013년도 282개 마을 4,77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우울 정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, 매우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(만족이 92.4%)를 보였고, 사업 실시 이전보다 우울 정도의 평균수치가 하락(5.09점→3.74점)함
- 또한 사업이 진행된 282개 마을에서 자살자는 단 1명에 불과함(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로 환산 시 4.6명에 불과)
-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(총사업비 9천3백만원)과 인력으로 282개 마을로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 확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-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
 - 지역적으로는 농산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자살률이 높고,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음
 - 다양한 노력으로 2012년에는 자살률의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

-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대폭적 증액이 필요함.
 - 자살률은 우울증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필요
 - 충남도는 도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부검, 자살고위험군의 파악, 상담, 사례관리, 행복마을 사업 등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 - 그러나 주어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존재

- 가장 효과적인 예방정책 중 하나인 ‘생명사랑 행복마을’ 사업을 충남도는 양적 확대하는 정책을 진행 중인데, 사업의 질을 동시에 견인하는 정책 시행 필요
 - 현재와 같이 전담인력과 예산의 부족한 상태에서 ‘생명사랑 행복마을’ 사업을 282개로 확대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졸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
 -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기존 3년의 사업을 충분히 평가하고,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
 - 그리고 기존의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3농혁신, 희망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과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

● 중앙정부-충남-시군의 공조체제 구축할 필요성 절실

- 자살예방정책의 문제는 중앙정부, 광역 및 기초단체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, 중앙정부의 노력은 선언적 차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정책 건의가 필요
-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정책 및 예산 연계와 이를 통해 기초단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
- 시군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, 충남도와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. 

이 수 철 책임연구원

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
041-840-1235, sclee@cdi.re.kr

본 보고서는 “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(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, 2013)”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

◆ 참고자료 ◆

- 가천의과학대학교, 2008,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. 건강증진사업지원단
- 김왕배, 2010, 자살과 해체사회, 정신문화연구, 33(2), 195-225
- 박형민, 2010, 자살, 차악의 선택: 자살의 성찰성과 소통 지향성, 서울: 이학사
- 박형민, 2011, “우리나라 자살예방대책의 현황”. 형사정책연구 소식. 2011 여름 pp. 2-4.
- 보건복지부, 2005,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: 세부추진계획. 보건복지부
- 보건복지가족부, 2008, 제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. 보건복지가족부
- 노원구, 2012, 구정백서. 노원구
- 노원정신보건센터, 2012,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성과보고서. 노원구
- 이수철 외, 2013,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, 충남발전연구원
- 한국자살예방협회, 2011, 자살예방기본계획. 보건복지부
- 노원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- <http://www.nowonmind.or.kr/>
- 노원구청 홈페이지 - <http://www.nowon.kr/>
-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- <https://suicide.blutouch.net:6004/>

충남리포트(2008~)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08-01	허베이 스피리트(Hebei Spirit)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	송두범	2008. 1.21
2008-02	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	강영주	2008. 2.22
2008-03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	이충훈·권영현	2008. 3.19
2008-04	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	조봉운·송두범	2008. 5. 2
2008-05	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」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	송두범·강영주	2008. 5.27
2008-06	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	이관률	2008. 6.19
2008-07	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	신동호·강영주	2008. 7.30
2008-08	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	백운성	2008. 8.29
2008-09	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·군별 균형발전 평가	원종문·강영주	2008. 9.30
2008-10	「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」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	백운성	2008.10.30
2008-11	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	오용준	2008.11.28
2008-12	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	정옥식	2008.12.30
2009-01	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	강영주	2009. 1.30
2009-02	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	한상욱	2009. 2.24
2009-03	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	정종관	2009. 3.11
2009-04	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	전승수·한상욱	2009. 3.18
2009-05	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	오석민·한상욱	2009. 4.24
2009-06	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5. 8
2009-07	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	임준홍	2009. 6.29
2009-08	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7.23
2009-09	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	최인호	2009. 8. 6
2009-10	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	윤병선·유학열	2009. 9. 7
2009-11	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	임준홍·이상준외	2009. 9.30
2009-12	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	조한석·백운성	2009.10.30
2009-13	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	임형빈·유학열	2009.11. 9
2009-14	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!	김용웅	2009.11.18
2009-15	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	이재완·이관률	2009.12.11
2009-16	대전·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	류덕위·김양중	2009.12.31
2010-01	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	임준홍·조수희외	2010. 1.29
2010-02	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2.24
2010-03	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-사회계정행렬(SAM)을 통한 분석	임재영	2010. 3.10
2010-04	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	이용재·임준홍	2010. 3.18
2010-05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	이충훈·권영현	2010. 4. 5
2010-06	아·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	최병학	2010. 4.30
2010-07	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	김양중	2010. 5.10
2010-08	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	송두범	2010. 5.27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0-09	대전·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6. 3
2010-10	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	장동호·윤정미	2010. 6.21
2010-11	충남 귀농·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	유학열	2010. 8. 9
2010-12	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	신동호	2010. 8.16
2010-13	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(1998년-2007년)	임재영	2010. 8.19
2010-14	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	이인희	2010.10. 6
2010-15	사람중심,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	조명래·임준홍외	2010.10.29
2010-16	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	임준홍·김양중외	2010.11.09
2010-17	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	임형빈	2010.11.16
2010-18	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	오용준	2010.12.30
2011-01	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·군의 대응방안	한상욱	2011.01.13
2011-02	2011년 충남의 GRDP 전망	김양중·이선호	2011.02.10
2011-03	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	이충훈	2011.03.31
2011-04	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	사공정희	2011.04.21
2011-05	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	임준홍 외3명	2011.05.02
2011-06	수질오염총량관리제!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	이상진·김영일	2011.06.23
2011-07	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	성태규외	2011.06.30
2011-08	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1.07.11
2011-09	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	정옥식	2011.07.27
2011-10	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	성태규	2011.08.22
2011-11	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·협력 방안 연구	김양중	2011.10.31
2011-12	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	홍성효	2011.11.30
2011-13	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	이인희	2011.12.29
2012-01	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	김종수	2012.01.31
2012-02	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	신동호	2012.02.13
2012-03	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4	2012년 충남 GRDP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5	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	임형빈	2012.03.12
2012-06	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	송두범·김종수	2012.04.02
2012-07	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	김영일	2012.05.31
2012-08	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	조영재	2012.06.21
2012-09	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	전영노·백운성외	2012.08.10
2012-10	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	허남혁·정준	2012.08.16
2012-11	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	윤정미	2012.09.20
2012-12	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	정옥식	2012.10.31
2012-13	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	사공정희	2012.11.28
2012-14	한·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	김양중	2012.12.12
2013-01	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	홍성효 외	2013.02.21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3-02	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	김양중	2013.03.07
2013-03	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	송두범 외	2013.04.19
2013-04	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	여형범	2013.04.29
2013-05	충남지역 귀농·귀촌 실태 비교 연구	유학열	2013.05.10
2013-06	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	강마야·여민수	2013.07.10
2013-07	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	허남혁 외2명	2013.07.18
2013-08	대형마트 의무휴업, 그 후 1년; 일본 상정가정책의 시사점	이민정	2013.08.09
2013-09	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	이관률	2013.08.23
2013-10	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-지역경제분야-	김양중	2013.09.02
2013-11	도 및 시·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	윤정미	2013.09.16
2013-12	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	김종화	2013.10.24
2013-13	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	이인희	2013.11.15
2013-14	유류사고 이후,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	김종화	2013.11.18
2013-15	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	백운성	2013.11.19
2013-16	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	김경태	2013.11.20
2013-17	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	이관률	2013.11.21
2013-18	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	김양중	2013.12.19
2014-01	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	정옥식	2014.01.01
2014-02	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	이충훈	2014.01.09
2014-03	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	송두범	2014.01.21
2014-04	이제!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	이상진	2014.01.27
2014-05	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,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	이민정	2014.01.28
2014-06	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 대책, 예방이 최우선이다!	정옥식	2014.02.11
2014-07	지원·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	이인배	2014.02.13
2014-08	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	김양중	2014.02.20
2014-09	사라지는 농촌마을! 한계(限界)마을정책 도입해야	조영재	2014.02.25
2014-10	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	김양중	2014.02.28
2014-11	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	이관률·정현희	2014.03.06
2014-12	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4.03.13
2014-13	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	김원철	2014.03.27
2014-14	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	최병학	2014.04.03
2014-15	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	고승희	2014.04.16
2014-16	충남 논·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	정옥식	2014.05.08
2014-17	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	임준홍·홍성호	2014.05.15
2014-18	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·협력 추진 방안	오명택·김정연	2014.06.12
2014-19	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	김양중	2014.06.19
2014-20	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	송두범	2014.06.24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■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